

## ‘민족’ 차별과 민족 ‘차별’

[서평] 정연태(2021),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344쪽.

김 정 인\*

### 1. 에토스적 개념에 대한 미시사적 분석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라는 제목은 민족차별이라는 에토스적 개념의 역사성을 일상사라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 이 책의 특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식민지기 민족차별이 “일제 강점기의 차별”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의 양상, 구조, 특성 등을 밝히는 것을 이 책의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재로서 학교, 특히 중등학교로서 상업학교에 주목한다. 1920년대 이후 상업학교는 한·일 공학으로서 더욱이 농·공·수산 관련 실업학교와 달리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의 비율이 비슷했다. 저자는 한·일공학의 중등 상업학교에서는 학생 선발부터 입학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상업학교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양태의 민족차별이 존재했을 것임을 선협적으로 전제한다. 그렇게 일상사 속의 민족차별이 아니라 민족차별의 일상사를 규명하고자 한다.

\*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저자가 민족차별이라는 에토스적 개념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 택한 미시적 분석 대상 학교는 강경상업학교였다. 이 학교의 학생의 선발·지도·평가·징계 과정과 졸업 이후 취업 과정에서의 민족차별을 살폈다. 놀라운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로 1920년부터 1945년까지 강경상업학교의 졸업생 977명과 중퇴생 512명, 모두 1,489명의 학적부를 모두 분석했다는 사실이다. 이 학적부가 <동창회(회원) 명부> 등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계량화되어 68개의 표로서 책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저자도 언급했듯이 25년이라는 장시간에 생산된 학적부, 그리고 동창회(회원) 명부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분석은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후학으로서 미시사적 분석의 이정표를 세운 그 노고와 열정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 2. 강경상업학교를 통해 본 민족차별의 일상사

이 책을 먼저 강경상업학교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학생 선발·교육과 관행적 민족차별’에서는 학생 선발, 지도, 평가 등 학교생활 전반에 존재했던 민족차별을 살피고 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노골적’인 민족차별이 일어났다. 민족별 입학 정원을 할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 지원 규모에 맞춰 민족별 모집 인원을 할당하는 차별이 엄존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 지원자의 입시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선발 시험이 모두 일본어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국인 지원자에게 유리할 리가 없었다.

학생 지도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민족차별이 일어났다. 학생 임원이나 교지 필자 배분에서는 민족별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학사징계의 경우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보다 거의 두 배에 달

하는 처분을 받았다.

학생 평가에서는 '묵시적'인 민족차별이 일어났다. 학생 평가에는 학업평가와 조행평가가 있었다. 학업평가에서는 일본인 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월등한 성적을 냈고 상대적으로 체격도 좋았던 한국인 학생이 교련이나 체조·무도 등 신체 활동 위주의 일부 과목에서는 늘 일본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다. 졸업, 진학, 취업 등에서 주요 사정자료로 쓰이는 조행평가는 먼저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적, 학사징계여부, 근태상황, 성행평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정회의와 교장의 결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방식이었다. 조행평가에서는 일본인 학생의 평균 등급이 한국인 학생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이것은 한국인 학생들이 학업성적은 물론 개근·정근 등의 근태 상황이 더 좋았지만 성행평가에서 민족차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처럼 한국인 학생은 노골적이고 실질적이면서 때로는 묵시적인 민족차별을 감내하는 학교생활을 해야 했다.

2장 '학생의 중퇴와 민족차별'에서는 학생 중퇴 양상의 분석을 통해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민족차별이 학생 징계에 작동했음을 살피고 있다. 중퇴 사유별로 구별해 보면 경제 사유로 인한 중퇴는 한국인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보호자인 정(正)보증인의 직업과 경제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했다. 농업 중심의 한국인 사회와 상업, 공무자유업 중심의 재조 일본인 사회의 정치경제적 격차의 반영물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경제 사유로 인한 중퇴에서는 관행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인 민족차별을 살필 수 있다.

성적 불량으로 퇴학당하는 빈도는 일본인 학생이 높았다. 그런데 강경상업학교에는 특진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유급할 위기에 처한 학생이더라도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진급시킬 수 있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나쁜 성적으로 퇴학당해야 하는 일본인 학생을 구제하는 데 활용되었다. 성적이라는 면에서 관행적 민족차별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행을 사유로 한 중퇴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민족차별이었다. 비행을 사유로 징계를 실시한 사례 중 하나인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급생 구타 사건으로 한국인 학생은 13명이 처벌받았으나 일본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식민지 당국과 학교 당국이 식민지 사회체제와 학교 질서의 안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제반 행위 즉 ‘불온’ 사상과 운동으로 인한 중퇴의 경우에도 일본인 학생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인 학생 중에는 24명이 이 사유로 중퇴해야 했다. 1923년부터 1939년까지 졸업생 중 개근상과 정근상을 받은 학생이 한국인 522명, 일본인 257명이라는 점에서 유추해 보았을 때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보다 모범적이었음에도 한국인 학생에게 더 많은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은 민족차별이 작동했기 때문인 것이다.

3장 ‘학생의 취업과 민족차별’에서는 졸업 이후 취업 과정에서 이뤄진 민족차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은 졸업 후에 선택한 진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졸업생 대부분은 취업을 원했다. 특히 금융조합 입사를 선택했다. 일본인 졸업생들에게는 취업, 가업 종사, 진학 등의 여러 선택지가 있었다. 취업의 경우에는 회사나 상점을 선호했다. 이는 식민지 사회의 경제구조와 학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반영된 구조적 민족차별이 가져온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 과정에서도 출발부터 민족차별이 상존했다. 학교장의 소견표나 추천서가 신입사원 채용의 사정 자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견표와 추천서가 학업평가와 조행평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 분야이든 상업 분야이든 학업평가나 조행평가에서 크게 뒤떨어진 일본인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한국인 졸업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일본인이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식민지라는 구조가 발산하는 민족차별과 일본인 교장과 교사의 평가에 스며들어 있는 관행적 민족차별이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두 세 개의 장으로 이뤄진 강경상업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한국인 학생들이 겪은 민족차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식민지배가 만들어낸 지배하는 자 일본인과 지배받는 자 한국인이라는 정치적 위계, 즉 민족차별이 일상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 3. 거시사적 시각에서 본 민족차별, 구조이자 관행

저자는 강경상업학교 학생이 경험해야 했던 민족차별에 대한 일상사적 분석에 이어 두 장에 걸쳐 민족차별에 대한 저항과 관행적 민족차별에 대한 거시사적 분석을 이어간다.

4장 '교사의 민족차별 언행과 동맹휴학'에서는 관행적 민족차별의 요인으로 민족차별적 법·구조·논리·의식 문제에 주목하고 이 문제의 단서를 찾고자 식민지기 중등학생의 동맹휴학(이하 맹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식민지기 중등학생의 맹휴는 주로 민족차별·말살의 문제, 전제적·독선적·억압적·폭력적 학생지도의 문제, 열악한 교육 시설과 교육 여건 문제를 둘러싸고 빈발했다.

이 중 교사 배척을 이유로 일어났던 맹휴에 주목해 보면, 한국인 학생들은 맹휴를 통해 교사의 민족차별에 저항하는 민족의식과 함께 교사의 반인권적인 교육에 저항하는 인권의식, 교사의 무능함에 대항해 학습권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의식을 표출했다. 그리고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실업계 학교보다는 일반계 학교에서 교사 배척 맹휴가 더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서 민족차별과 반인권적 교육에 반발하는 맹휴가 자주 일어났다. 한국 민족과 한국인을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상호 비교하면서 한국 민족과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등과 같은 교사의 민족차별적 태도와 행동이 학생들을 맹휴로

이끌었다. 이러한 민족차별을 합리화하는 논리로는 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에 기초한 야만인론, 한국인의 결함과 부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민족성론, 망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책하도록 하는 망국민론이 있었다. 일본인 교사의 내면의식 안에서 이 세 가지 논리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민족차별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다.

5장 ‘관행적 민족차별과 법·구조·의식의 문제’에서는 관행적 민족차별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법적 차원에서 보면 동화교육이 강화될 때마다 교육과정의 민족차별성이 강화되었고 중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공립 중등학교는 일본인 위주로 설립되었고 관공립 실업학교는 입학 기회가 민족차별적이었다. 하지만 법적 민족차별은 차츰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일본인 관료가 장악한 민족차별적인 교육·행정 구조와 위계관계가 작동했다. 일본인 교사의 수가 압도적인 공립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은 사제관계라는 교육적 위계관계, 일본인 교사 대 한국인 학생이라는 민족적 위계관계, 교장을 매개로 한 차별적인 식민교육 행정체계 등 삼중의 민족차별적 구조에 얽매어 지내야 했다. 의식적 차원에서 보면 맹휴를 통해 배척 대상이 되었던 교사들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던 한국 멸시·차별관이 민족차별적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문명 일본 대 야만 한국’, ‘일본인의 우수한 민족성 대 한국인의 열등한 민족성’이라는 위계적 구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처럼 두 장에 걸쳐 이뤄진 식민지기 학교교육에 뿌리내린 민족차별이 갖고 있는 법적·구조적·의식적 문제와 그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된 맹휴 과정에서 드러난 민족차별 양상에 대한 거시사적 분석은 강경상업학교라는 하나의 교육공간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한 민족차별이 하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학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드러낸다.

#### 4. 식민지 민족차별의 이론화

이 책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시사적이고 거시사적인 시각에서 민족차별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식민지기 민족차별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국근대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식민지 민족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민족억압, 민족수탈, 민족차별, 민족(성) 말살'을 꼽는다. 하지만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이 4대 지표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양상, 구조와 특성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된 사정은 일본의 식민통치의 반문명성을 당연시하는 식민지 수탈론자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4대 지표 중에서 식민지 한국이 일본 본국과 차별되고, 식민지 한국인이 본국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으로부터 이중차별을 당하는 현상, 즉 민족차별에 착목한다. 식민지 민족차별 문제 역시 이제껏 전면적으로 해부한 연구성과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민족차별의 양상, 구조, 특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식민지기 민족차별이 민족·인종차별의 역사에서 보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베르 멤미(Albret Memmi)의 차별주의론을 준용해 '식민지 민족차별'의 논리를 구성한다.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에 발견되거나 날조된 부분적, 일시적, 국부적 차이가 민족 전체화, 역사 보편화, 대상 일반화로 나아가기 마련인바, 식민지 민족차별은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요약하며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민족차별이 전개되는 층위와 양상을 법적 민족차별, 구조적 민족차별, 관행적 민족차별로 범주화한다.

법적 민족차별은 명시적인 법 규범이나 제도를 통한 차별을 가리킨다. 이는 행위주체인 국가권력의 의지에 의해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것이다. 구조적 민족차별은 이미 형성된 정치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위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적·사실적 차별을 가리킨다. 관행적 민족차별은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한 의식과 문화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정서적·사회적 차별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직이든 행위 주체의 의지에 의해 표출되는 언행을 통해 가해진다. 법적·관행적 민족차별이 행위 주체의 의지나 정서가 반영된 현상이라면, 구조적 민족차별은 사회구조와 위계관계와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법적 민족차별은 식민지배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식민권력에 의해 완화되거나 조정되는 길을 걸었다. 하지만 구조적·관행적 민족차별은 의연히 지속되었다. 저자는 특히 식민지 민족차별의 다채로운 양상과 특성을 보여주는 관행적 민족차별에 주목한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지만, 강경상업학교에 관한 미시사적 분석이나 거시사적 시각에서 맹휴를 규명할 때 관행적 민족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저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식민지기 법적·구조적·관행적 민족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차별적인 학제가 개선되었지만 한·일 공학 중등학교에서조차 학생 선발·교육·징계 그리고 취업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행적 민족차별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구조적 민족차별이 전개되었음을 살펴볼 때 차별적 법제 개혁으로만 차별 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다. 둘째 무엇보다 식민지기 한국인 학생이 맹휴를 통해 민족차별적 제도나 언행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듯이 구조적·관행적 차별을 제어할 수 있는 민족적 또는 시민적 역량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차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자의 내면세계

와 생활 세계에 뿌리 내린 차별적인 의식과 문화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조적 차별과 관행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식민지기 민족차별에 대한 미시사적이고 거시사적인 분석과 함께 이론화를 시도한 저자의 소중한 성과는 앞으로 민족차별 연구의 확장에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 5. ‘민족’ 차별과 민족 ‘차별’

저자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민족차별 외에도 신분 차별, 성차별, 빈부 차별, 학력 차별 등이 서로 얽혀 발생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신분 차별, 성차별, 빈부 차별은 전근대사회부터 등장해 식민지기에 온존, 지속되거나 강화된 것인 반면 학력 차별과 민족차별은 식민지기에 전면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식민지기에 학력사회화가 일단락되었으나 각급 학력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상위 학력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한 사회, 즉 학력 차별이 민족차별과 중첩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자가 강경상업학교라는 중등학교를 선택해 민족차별의 양태를 분석한 것은 ‘식민지 근대’에 생겨난 새로운 차별에 주목한 셈이 된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조망한 민족차별의 역사상을 곰곰이 따져보면 저자가 민족+차별이라는 합성어에서 행위로서의 차별보다는 주체로서의 민족에 더 강조점을 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민족’이 받은 차별이 여러 차별 중 하나가 아니라 식민지기의 가장 본질적인 차별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민족’차별관의 바탕에는 ‘우리 ‘민족’이 차별을 받았다!’는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자리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저자도 “일제 강점기의 차별을 표상하는 것은 민족 차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책이 강경상업학교의 학적부 분석을 통해 민족차별을 도출하는 귀납적 수순이 아니라 민족차별을 강경상업학교 사례를 통해 실증하는 연역적 논리에 따라 서술된 것도 이러한 ‘민족’차별관에서 연유한 듯하다.

이 책처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민족’차별론이 있는 반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도출되는 민족‘차별’론도 있다. 여러 가지 차별에 위계와 구별을 두지 않고 민족차별을 그 중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다. 공평과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시야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 지역 차별, 학력 차별, 연령 차별, 직업 차별, 빈부 차별, 임금 차별 등이 온존하고 있고 그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21년 현재 한국에서는 저자가 관행적 차별의 극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듯이 차별금지법의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민족주의적 시각에 따라 차별 간에 위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민족차별은 많은 차별 중 하나인 인종차별에 포함된다. 물론 시기, 나라, 사회에 따라 문제시되는 차별의 종류는 다르기 마련이다.

저자 역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민지기 민족차별을 법적·구조적·관행적 범주로 분석하고 이를 오늘날 차별 문제 해소의 대안 모색의 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인·사회·민족 = 피해자라는 구도에서 식민지 민족차별의 문제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구도가 역전된 오늘날 한국사회의 ‘오래된 미래’를 발견”해야 한다는 서술에서 드러나듯 민족주의적 관점의 ‘민족’차별관에서는 민족차별이 해방과 함께 소멸한 것으로 보는 듯하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 해방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민족차별은 소멸되었는가?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민족차별은 사라졌다.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민족 ‘해방’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과 달리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해방이라는 대사건으로 민족차별, 즉 인간을 집단화하여 구별 짓는 인종적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적·구조적 민족차별은 사라졌지만 관행적인 민족차별, 즉 차별적인 의식과 문화는 해방 이후 사회문화적 지형에 따라 변용되어 지속되었다. 식민지기에 경험한 민족차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서양인에 대한 선망과 사대주의,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강한 멸시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민족차별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 바, 식민지기에 국한된 분석만으로는 보편성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식민지기로 돌아가 당시 중등학생들이 자각하고 경험한 차별 문제를 들여다보자.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에서의 학생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경신학교 3학년 조용석은 시위 참여 동기를 묻는 신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또 일본 사람들과 조선 사람의 대우에 차이가 있다. 또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받고 있는 교육의 정도에도 차별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독립을 하면 그런 불만이 없어질 것이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용석의 사례를 통해 학생으로서 민족차별에 대한 자각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시위 참여라는 행동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현실에서 일상화된 민족차별 경험이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게 만든 계기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인 남학생의 한국인 여학생에 대한 무례한 행동과 이에 반발하는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응을 계기로 발발해 전국화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광주 사건의 의의>라는 1929년 12월 29일 자 사설에서 그 원인으로 “조선이라는 토지 내에 성립된 부자연한 양 민족의 주객전도적 관계” 즉, 민족차별을 꼽았다. 식민지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일상화되고 관행화된 민족차별을 경험해야 했고, 그것이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당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서의 학생들이 민족의식에 기반해 ‘민족’차별에 분노했는가, 아니면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의식에 기반 해 민족‘차별’에 항의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민족의식과 인권의식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양자 간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족차별을 ‘우리’ 민족이라는 주체가 차별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즉 민족의식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만 들여다 보서는 민족차별의 보편성을 해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경상업학교에서 일어난 민족차별을 분석한 노작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차별의 보편성을 해명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면, 첫째, 이 책이 ‘어떤 민족차별이 있었는가’를 분석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학생이 민족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방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식민지적 위계에 따른 민족차별의 양상은 사라졌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차별의 문화와 의식은 변용되어 오늘날까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사례를 분석한 이 책이 미처 다루지 못한 식민지기 민족차별의 혼종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것은 민족‘차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가령 당시 한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민족차별은 물론 성차별과 임금차별 등을 중첩된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혼종된 차별 각각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따져봐야 한다. 다시 말해 식민지기에 일어난 사회운동마저 민족운동 안에 포섭하려는 연구 풍토에 기반 해 식민지기에 일어난 다양한 차별을 일단 민족차별로 수렴하려는 경향

을 경계해야 한다. 식민지기 차별의 역사가 민족차별을 전제로 재현되는 한, 차별의 역사마저 해방을 전후로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6. 민족사를 넘어 보편사로

이처럼 이 책이 제기한 식민지 민족차별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위해 좀 더 보편사적인 접근을 제기하면서 두 가지 남은 과제를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식민지기에 일어난 민족차별의 피해자로서 한국인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인·사회·민족 = 피해자라는 구도가 해방이 되면서 역전되었다고 파악한다. 해방 이후 민족차별이 소멸하면서 한국인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자리바꿈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성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차별에 대해 '오래된 미래', 즉 살아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민족차별 문화와 의식이 해방 이후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일본인으로부터 '당한' 민족차별이 한국인에게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했는가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반인권적인 차별 문제가 갖고 있는 보편성에 접근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편, 저자는 “한국사회가 새로운 근대성을 발신하는 선진사회로 대전환하기를 희망한다면, 무엇보다 차별문제부터 성찰해야”함을 역설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선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뤘다. 그것을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하면 곧 민족패권주의 시대를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순간 그것이 패권주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의 피해자로서의 피해의식을 반일민족주의 혹은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로는 영토민족주의 등으로 변용해 발전시켜 왔다. 거기에 담긴 선진화와 패권에 대한 열망이 한국을 선진사회로 진입시킨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피해의식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등한 지위, 즉 저자의 지적처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의 구도 역전이 이뤄졌기에 이제는 위험한 에너지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차별 문제에 있어서 나는 혹은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는 곧 과거사 문제에서 식민지기 민족차별에 대한 연구가 보편 가치 지향의 과거사 ‘극복’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민 지배를 받은 기간보다 두 배나 더 긴 세월을 보낸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일본 = 왜, 중국 = 오랑캐와 같은 피해자 의식의 뒤틀림에 대한 분석과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일본에 대한 과거 청산 요구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의 과거사 극복 혹은 치유 노력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국회에 제출된 ‘역사왜곡방지법안’은 우리의 굴절된 피해자 의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처럼 민족차별이라는 민족문제를 정면으로 천착한 이 책은 역설적인 과제를 남긴다. 민족차별이 민족사가 아니라 오늘날 보편사적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늘 후학들에게 한국 근대사 연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 선학이 내놓은 역작은 중요한 문제의식과 풍부한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꼼꼼한 실증, 그에 대한 정밀한 분석, 미시사와 거시사의 결합,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틀. 이 모든 것을 한 권의 책 속에 담고 있다. 후학으로서 식민지에서의 차별문제, 그것의 해방 후의 변용 문제, 과거사 극복과 치유 문제로서의 민족 차별에 대한 접근 필요성 등 의미 있는 과제를 던져준 저자에게 감사드리며, 분발을 다짐해 본다.